

주차난에 전기차도 적은데…충전시설 또 설치하라니

광주 전남대병원 등 571곳
유예기간 끝나 과태료 위기
시설 확보율 20% 불과
스마트 충전기 비용 부담

광주시 동구 학동의 전남대병원은 일주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20기를 추가 설치하는 상황에 놓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차장을 1117면 보유한 데 따라 22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는 2기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 주차장 관리자 측은 “충전시설을 찾는 고객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2기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더 설치해야하느냐”며 “병원 특성상 이용자 연령대가 높아 전기차를 모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답답할 때”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되면서 충전시설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공공기관, 아파트 등 571곳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광주시 5개 차지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 지역에는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지 2681곳에서 유예 청구한 1112곳을 제외한 1569곳 중 998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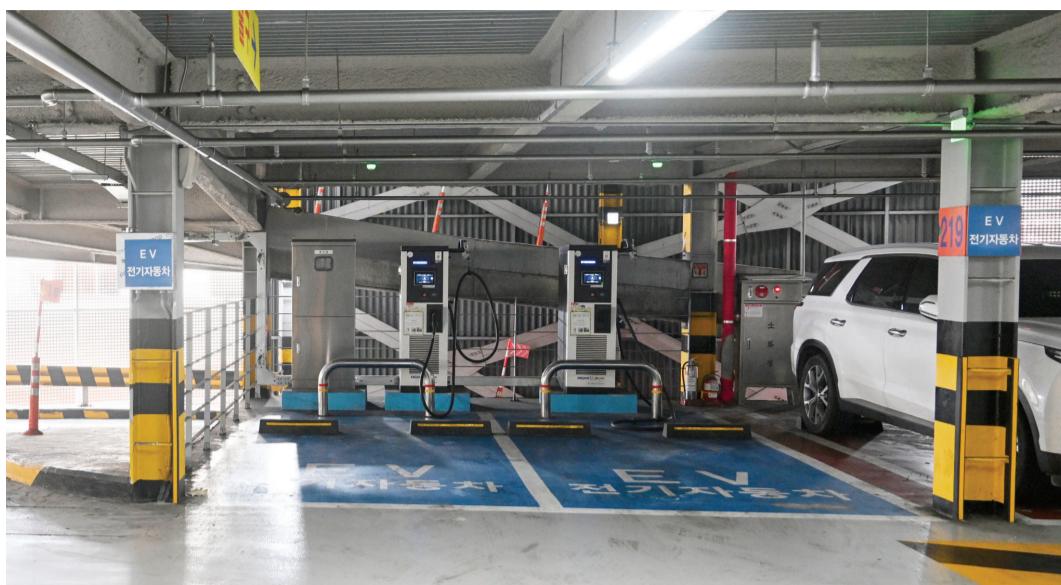
전체 대상지 중 571곳(36.3%)은 충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세 곳 중 한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셈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 주차단 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이 원칙이며,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이다.

차지구별로는 동구 18곳(14.8%), 서구 127곳(41.6%), 남구 81곳(35.8%), 북구 138곳(29.7%), 광산구 207곳(41.1%)에 충전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설비 공사, 주차면 재배치, 비용 부담 등



19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제2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비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을 고려해 최대 4년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뒀으며, 오는 27일 유예기간이 모두 만료된다.

미아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기기당 각 주차장 요금에 따라 20~50만원씩 부과될 방침이며, 시설 조건에 따라 추후 세부 산정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들은 “직원중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도 많지 않고, 방문객중에서도 손에 꼽는데 급하게 설치해야 해 부담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보조금 조건이 바뀌면서 신규 설치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일반 완속충전기 설치 시에도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2025년부터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충전을 제어(전력 분배 등)해 화재를 예방하는 등 기능을 갖춘 기기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제어 충전기 가격대는 7kW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형성돼 있지만, 한전 부담금과 공사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해 300여만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충전기 가격도 80~100여만원에 달한다. 시설 한 기기당 드는 유지보수비용은 기기당 5~1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전

해졌다.

현행법상 ▲충전 상태 정보가 3일 연속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기 점검 결과 미제출 및 연간 운영률 95% 미만일 경우 ▲의무 운영 기간(5년) 내 출력이 설치 규격의 80%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등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8년간 전기차 설치업체를 운영해 온 업체 대표는 “보조금으로 사설상 무료라고 생각했다가 상담과정에서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5년은 적자가 난다. 보조금 신청 조건도 까다로워진 추세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안내공문 발송을 완료하고 현재 미아행시설별 이행계획을 취합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간 만료 하루 뒤인 오는 28일 이후 미아행 시설에 대해 추가 현장확인 실시 후 최대 1년의 시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시정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임금체불 사업주, 채용공고서 확인하세요

고용부, ‘고용24 오픈API’ 통해 606명 공개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자의 정보를 민간 취업플랫폼, 채용공고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60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고밝혔다.

오픈API(앱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민간 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명단 등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텍스트(줄글) 형태의 명단을 일일이 열어봐야 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오픈API가 공개되면, 민간취업포털 등에서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도 일자리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KT, 과징금 불복 소송

2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이브리드 충전하다가 새벽에 나와 차 빼라고?

7시간 이상 충전 땐 과태료…전기차는 14시간 ‘형평성 논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전기차는 14시간 장시간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만 콕 집어 7시간 주차 제한을 걸어 전기차 운전자들과 일반 차량운전자들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19일 광주시 5개 차지구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구역을 7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는 기준대로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적은 PHEV가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충전 시간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목소리와 주차 공간의 형평성이 둘러싼 논란이 교차하고 있다.

당장, 퇴근 후 밤샘 충전을 해 왔던 이용자들은 새벽에 나와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PHEV 차주 박모(30·광주시 동구 수기동)씨는 “보통 오후 6~7시에 퇴근해 충전기를 끌는데, 7시간 기준을 맞추면 새벽 2시에 나와

차를 옮겨야 한다”며 “잠결에 시간을 놓쳐 안전신문과 신고라도 당할까 봐 불안해 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모(60·북구 운암동) 씨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시간 제한을 두기보다, 충전 완료 여부를 감지해 알림을 주는 등 기술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24시간 전기차 전용’인 충전 구역 운영 방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라리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 시간대만은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공간 분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모(30·남구 백운동) 씨는 “유예기간이 끝나 충전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에 충전기가 비어있어도 일반 차량은 접근조차 못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정 시간대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겸용 주차 방식 도입이 절실히”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여부가 파악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형 만원주택 인기…경쟁률 154대 1

광양·무안서 10명 선정

이들 지역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장동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젊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 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면지로 36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교정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 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
||